

수입사료곡물에 부과금제도 실시는 문제 있다

— 생산자단체 초청 축산인 조찬회 —

— 취 재 부 —

지난 5월 28일 오전 7시 파레스호텔 라일락룸에는 이른아침 인데도 축산관계인들이 30여명 모여 업계의 관심사를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이날 조찬회에는 축산회관에 입주한 축산생산자 단체의 회장단, 전무 및 국회 농수산분과 위원회의 김현욱, 김성식 여야 위원과 학계에서 오봉국, 박영일 교수, 농수산부의 각 과장들이 참석하여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날 토의는

1. 수입 농산물의 부과금제도 실시에 관한 의견 교환
2. 자조금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교환
3. 기타 축산업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1. 부과금 문제

부과금 제도는 생산비만 상승시켜 생산자 부담 과중

정태원(양계협회장) - 일반적으로 공산품은 생산자의 제조원가에 따라 판매자가 결정 되지만 축산물은 생산원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특성이 있는 것을 항상 잊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물량이 남아도 가격이 폭락하고 모자

라면 폭등하는 등 우리나라 축산업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대가축인 육우 낙농업이 어렵고 양계도 채란, 육계업 모두 오랜동안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양돈이 좀 괜찮다고는 하지만 8월부터는 어려워지리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불안정한데 수입 사료 곡물에 부과금을 징수하면 생산비가 가중되어 축산업은 곤경에 처하게 될것이며 심각한 국면에까지 이르게 될것이기 때문에 양축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금을 징수하여 축산업 발전에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개괄적으로 농어촌 개발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돈을 내는 축산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부과금제도에 해당하는 축산진흥 기금이나 사료안정기금 등이 양축가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축산물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7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쉽게 추측이 되는데 이를 6백 20만톤 규모에서 억제하라고 하면 무리가 뒤따를 것입니다.

현재 생산비 이하의 축산물 가격형성으로 고생하는 많은 양축가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부과금제도는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입니다.

축산물에는 부과하되 원료는 안돼

정희식(양돈협회 부회장) - 부과금제도는 운영하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품목선정은 엄격하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농민은 사회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호육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런면에서도 축산물 수입에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사료원료 등 원자재는 관세까지도 면제 해주어야 국제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양돈의 경우 관과 민이 조금만 협조가 된다면 연간 1억불 정도 수출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과 민이 머리 맞대고 연구해야 됩니다.

150만두 기르는 나라가 지난 3년간 100만두 수입

유윤수(낙농육우협회장) - 각계에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 차원에서 문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소를 기르는 농가가 백만호나 됩니다. 이 농가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 3년간 150만두를 기르는 나라에서 소를 100만두나(고기포함)수입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던 사건입니다.

농산물의 경우에 3~4%만 생산량이 증가해도 가격파동이 오는데 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형편이 어떠한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소값도 안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의 소를 수입하고 이 소들이 먹을사료에 부과금을 붙이겠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중대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녹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경의 환자에 쓸 수 없어

EC 등에서 부과금제도가 성공한 것도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경을 해매는 환자에게는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부과금 제도는 현실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축산진흥기금이 소입식 용자금으로 대부분 쓰여지고 축산기반조성에는 별로 쓰여지지 못하고 기금도 통합되어 어떻게 운영될지 의문입니다.

분유체화량보다 수입량이 훨씬 많아

현재 우유, 쇠고기가 남아 도는데 분유의 경우 약 5천톤이 남는데 수입은 연간 2만 5천톤이나 하니 어떻게 수급정책을 세워서 이런 현상이 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안정 위에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위한 자금 농민에게서 걷는다면 의미 없어

송찬원(중축개량협회장) - 어렵게 축산기금을 조성해서 그래도 축산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만든지 8년만에 없어지니 큰일 입니다. 정부가 농촌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큰기대를 가졌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부과금을 받는다면 농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사료곡물에 부과하는 것이 기금마련이 가장 쉽고 빠르는데 이렇게 되면 양축가들은 각부처가 만든 농촌 개발계획 자금을 장만하는 뒷차닥거리 밖에 못하는 것이 되어 불만이 많아질것 입니다.

정책에 농민의 소리 반영되어야

김현욱(민정당 국회의원, 농수산분과위원) - 85년 미국축산업계를 국내 축산업계 대표들과 함께 시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농어촌개발을 위해 필요한 돈을 농민에게서 걷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주발전을 위해 협회들이 자생적,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도록 정부는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되며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자조금(check off)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될것 입니다.

관은 앞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업계의 불만을 청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 됩니다.

부과금 제도 운영에 축산업자 걱정안해도 될것

신순우(축산과장) - 부과금제도는 경쟁력 없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원당, 커피, 참깨, 땅콩 등 국내 가격과 수입가격의 차가 큰 품목에만 부과 될 것으로 너무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축산기금은 그동안 3천억원이 축산기반 조성에 사용되었으며 기금이 통합되어도 계정을 달리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축산단체들이 성장하였으니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산조절 등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성식(신민당국회의원농수산분과위원) -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회 활동을 통하여 충실한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조금 제도는 업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오봉국(서울농대교수) -업계가 스스로 살아 가려면 자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1970년 초반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80년대에 와서도 초기부터 전국순회 지방강습회에 다니며 자조금제도를 설명하였고 이에 양계농가들이 적극 호응하여 연판장까지 받아서 건의 하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조금제도를 잡부금 정도로 생각하거나 축산진흥기금이 있는데 또 무슨 기금이 필요한가 하는 자조금과 진흥기금의 성격을 혼동한 다든가 아니면 물가 상승요인이 되어 정부의 물가 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조금제도는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생산조절의 역할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양계산업 안정기금제도가 있어 민간이 50%, 정부가 50%를 보조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이 기금의 활용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산업안정화에 절대 필요합니다. 기금 조성 방법도 무임승차하는 것을막기 위하여 축산업이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으니 이에 약간만 부과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에 절반정도는 출연금을 내야 될것입니다.

정부가 농민 외면하면 농민 설 땅 없어

강성원(서울우유협동조합장) -어제는 부총리께서 담배와 쇠고기를 점진적으로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농산물의 50%정도 밖에 자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의 80%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마저도 담배, 쇠고기 등을 수입하여 자급율을 떨어 뜨린다면 농민이 설 땅은 어디입니까?

부총리께서 국내 농민의 눈치를 안보고 이러한 다면 문제입니다.

부과금제도는 좋은제도 이지만 우선 배합사료에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를 축산발전을 위한 기

금으로 조성하는 폭넓은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며, 흔히 비교우위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처럼 머리 좋고 재능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외국처럼 금리 3% (년리)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하고, 스웨덴처럼 40%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우유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축산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 간접투자가 이루어지면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이러한 자원도 없이 비교우위가 없다고 농민의 사기를 죽이고 괴롭히면 백만 농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비교우위가 없으니 그만두라하면 농민의 할일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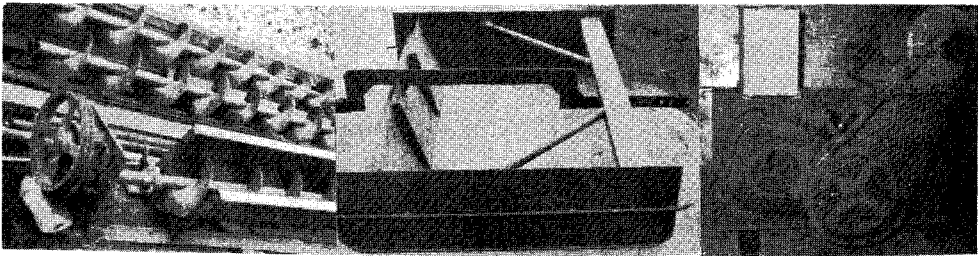
이런 방법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종합대책 건의서 등을 냈는데도 실행이 안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축산 업계의 각종 현안 문제들이 밀도있게 논의되었으며 자조금제도를 조기에 실시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었다.

이에대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추후에 게재하기로 하며 본지 85년도 8월호 (P80)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것이다. (永)

구미 축산 계분처리 system



- 전자주유기 : 폐유 사용으로 경비절감과 와이어의 수명 배
- 자동제어반 : 수동식의 불편함 완전 해소. 기계보호

※ 신개발품

- 케이지 해체와 토목공사없이 시공 가능
- 짧은 계사용. 소형 스크레파 개발

축산기계의 귀족

 **구미축산기계**
TOTAL LIVESTOCK. MACHINERY MFG CO.

본사및공장 :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화점리 439

TEL. 0346-65-8152

서울사무소 : TEL. 02-905-8298

은양사무소 : TEL. 0418-2-4170